

 국토교통부	<h1>보도설명자료</h1>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배포일시	2021. 7. 16.(금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건축안전과	담 당 자	•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 201-4987, 4989, 4986
	건설산업과		• 과장 김광림, 서기관 김학원, 주무관 안응철 • ☎ (044) 201-3538, 3509, 3511
	건설안전과		• 과장 한명희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안일찬 • ☎ (044) 201-3573, 3552, 3562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7차 회의 해체공사 안전강화 ·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논의

-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월 16일(금) 광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(노형욱 국토부 장관) 주재로 제7차 회의를 개최하였다.
 - 이번 회의에서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이행 부족 및 제도미비, 불법하도급 등 사고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.
- 먼저, 전국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결과분석과 해체공사 전문가 TF 등을 통하여 마련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,
 - 해체공사 계획서 작성 및 검토에 대한 전문성 제고, 감리자의 권한과 의무 강화 등 해체공사의 단계별(계획·허가·감리·시공) 안전제도를 재정비하고,
 - 제도의 현장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,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강화 및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도 추진한다.

- 또한, 국민들께서 주변의 해체공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, 누구나 위험사항 발견 시 신고 등을 통해 해체현장 안전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한다.
- 아울러,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의 예방·근절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.
 - 사고현장에서 나타난 불법하도급의 유형과 문제점을 토대로 실제 현장상황에 맞는 개선사항 마련을 위해 업계 관계자, 전문가,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으며,
 - 모범시공업체에 혜택(인센티브) 제공, 적발·처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, 적발시스템 강화 등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포함될 예정이다.
- 논의 중인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예방·근절 방안은 사고 조사위원회 조사(6.11.~8.8.) 및 유관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확정·발표할 계획이다.
- 노형욱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“해체공사 전반에 대하여 꼼꼼히 분석하고, 다양한 개선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줄 것”을 지시하며,
 - “사고가 발생한지 한 달여가 지났는데 해체공사 안전개선 및 불법 하도급 예방·근절 방안마련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 <p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 201-4989), 건설산업과 김학원 서기관(☎ 044-201-3509), 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35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